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3. 2.



금융감독원

목 차

I. 2023년 금융감독 방향	1
1. 금융감독 환경	1
2. 금융감독 방향	3
II.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방위적 대응 강화	6
가.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6
나.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9
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10
2.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11
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11
나.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13
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	15
3.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16
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16
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충	18
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	20
4.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	21
가.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	21
나.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22
다.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25

I. 2023년 금융감독 방향

1 금융감독 환경

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요인 부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① (대외) 글로벌 통화긴축,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에너지난 등의 영향으로 '22년에 비해 경제성장 둔화 전망*

* 성장률 전망('22^e→'23^e): (IMF, '23.1월) 3.2% → 2.9%, (World Bank, '23.1월) 2.9% → 1.7%

○ 주가는 상반기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연준정책의 전환 기대감이 상승 변수가 될 전망

- 금리는 긴축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上高下底'의 흐름이 예상되며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強달러 현상이 점차 약화될 전망*

* 단, 상반기중 美 소비·성장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인플레이의 하향 안정세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 추가 긴축 논의 우려 등으로 금리 및 달러가치 재급등 소지

○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불안 및 디폴트 확산,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② (대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글로벌 경기위축 및 분절화(Fragmentation)*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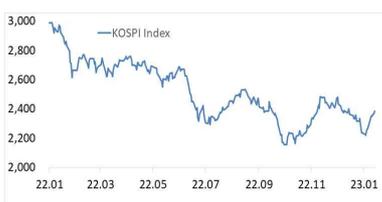
* IMF는 세계경제 분절화·국제협력 약화를 리스크요인으로 지목(World Economic Outlook^{'22.10월})

** 성장률 전망('22^e→'23^e, %): (한은^{'22.11월}) 2.6 → 1.7, (IMF^{'23.1월}) 2.6 → 1.7, (OECD^{'22.11월}) 2.7 → 1.8

○ 국내 금융시장은 상반기중에는 통화긴축 기조로 제한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다 하반기 긴축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점진적 회복 전망

- 다만, 부동산경기 둔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상환능력 약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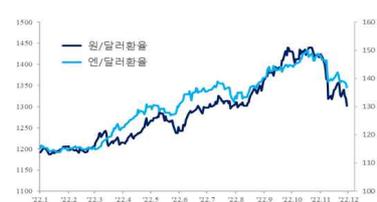
주가지수



국채(10년물) 금리



환율



나 2023년도 주요 리스크요인

- ◆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서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금융 악화, 디지털화 및 융복합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금융산업 신뢰 하락에 직면

①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및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부동산 채권 등의 자산가격 조정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증대
 - 채권·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으로 취약업종의 차환리스크가 심화되고 외부 충격발생시 금융권 전이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

② 서민 등 취약계층 민생금융 악화 및 소비자피해 확대

- 고물가·고금리, 경기 둔화 등 경제 여건 악화로 다중채무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한계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 악화
 -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영업행태 출현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가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하락 우려

③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비금융부문간 상호연계성 강화

-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제판분리 가속화* 등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확대 가능성
 - * 온라인 플랫폼 등의 금융상품 중개영업 확대로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흐름 확산
 - 금융회사 핵심업무의 외부 위탁·제휴 확대로 보안·IT 등 제3자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확대

④ 금융부문 신뢰 하락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확대

- 거액 횡령사고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책임지지 않는 경영 관행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교란 등 증권범죄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확대 가능성

2 금융감독 방향

가 기본방향

◆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 12개 핵심과제 수립

(전략 1)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 방위적 대응 강화

- ①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리스크요인 조기 파악 및 진단 분석체계 고도화,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②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시장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
- ③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 구축

(전략 2)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 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 강화, 금융소외 계층 대상의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
- ② (소비자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
- ③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리딩방·SNS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행위 집중 감시

(전략 3)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 ①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 육성, IT 리스크 감독 강화 및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 ②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충)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ESG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감독체계 마련
- ③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 금융혁신을 위한 감독 인프라 확충, 검사·제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전략 4)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 ① (금융회사 책임경영 관행 기반 조성)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및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유도,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경영 환경 조성
- ②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자본시장 공정기반 확충, 공시·회계 정보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조사업무 인프라 개선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단
- ③ (금융질서 저해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금리상승기 소비자피해 우려 부당영업행위 근절, 보험권 완전판매 문화 정착 유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

2023 금융감독 방향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전략 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 방위적 대응 강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전략 ②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소비자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

전략 ③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충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

전략 ④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회사 책임경영
관행 기반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질서 저해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2023 업무계획 기대효과



금융시장 안정 및 질서 확립

금융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건전한 시장발전 지속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금융산업의 신뢰 및 혁신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성장 실현



금융감독 혁신

금융산업의 질적성장을 위한
과감한 감독업무 혁신 추진



금융감독원

II.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쏠 방위적 대응 강화

가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적 대응 제고

① 리스크요인 조기 파악 및 진단 분석체계 고도화

□ 대내외 취약 리스크요인 사전 포착 및 신속 대응

- 美 긴축,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 및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
- 채권·단기금융시장 경색, 비은행권 리스크,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을 통한 위험 전이 및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 시장 불확실성 현재화 우려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공조체계 가동

*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회의 및 해외사무소 연계 「24시간 비상대응반」 운영

□ 시스템리스크 진단·분석 인프라 고도화

-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 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 정교화

* 신용손실 추정모형, 영업이익 추정모형 등

- 유동성 위기가 금융회사 건전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시스템 리스크 분석체계 마련
- 조기경보모형의 예측기간을 확대하고 모형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모형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

②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상황 급변동 대비 모니터링 강화

-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은행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 선행지표를 고도화*하여 종합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 * 신용(가계·기업), 시장(금리·환율·주식), 유동성 등 관련 선행지표 집중 모니터링
- 외국인 투자동향 등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등 강구

□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집중 점검

- 부동산發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하여 PF사업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 강화
 - * 예) ① 금융권역별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
②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 분석체계 세분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
- 부동산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
-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부동산, 비부동산), 유형별(신용공여, 유동성 공유) 현황 등에 대해 심층 분석
 - * 채무보증의 사업승인위험, 준공위험, 분양위험, 회수위험 등
- 보험회사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체계,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 점검
 - *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준수 여부 등

□ 비은행권 유동성리스크 관리 정교화 및 상시감시 강화

- 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추진*
 - * 예)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비율 도입 등
- 유동성 부족 우려가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여전사의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 운영현황 점검

□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 및 자영업자 리스크관리 강화

- 高물가·高금리·高환율(3高) 취약업종 내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예) (일시적 위기기업) 신속금융지원제도 등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등

- 금융권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의 금융·非금융 정책 지원제도*를 동시 가동하여 부실우려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 마련 유도

* 예) 사업재편 지원(산업부), 회생 컨설팅(중기부), 구조개선자금 지원(캠코) 등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정교화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시 활용중인 RTI* 및 LTI** 운영현황 점검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to-Interest) **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

□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제고 및 위기발생 대비 관리 강화

- 위기시 은행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버퍼를 확대하고, 비은행권까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대상을 확대* 검토

* 비은행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외화유동성 확충을 지도

- 은행의 안정적인 외화조달 및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해 신규 조달·차환 및 만기상환 관리 강화*

* 예) 자본성 외화증권 상환조건 등을 점검하고 위기단계 증가 등 유사시 대응방안 마련

□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연착륙 유도

- 차주단위 DSR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현황 및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업권별·차주별 가계대출 취급현황 및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나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

◆ 금융시장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충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능력 제고

- (은행)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적립 확대 유도
 -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연 1회 이상)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검토
 -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
 - * 예) 업종별·부문별 익스포져, 환율·금리·주가 변동에 따른 영향 등
 - 금리 상승 및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은행에 대한 자본관리 강화 유도*
 - * 예) 취약은행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본관리계획 마련을 요청하고, 은행·지주·은행의 자체 배당가능이익 산출 및 보고체계 점검
- (중소서민)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여전사 등을 조기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유도
 - * 예) 카드사의 경우 연체전이율, 정상입금률,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등 연체율에 선행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기둔화 심화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여신 등 취약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결제성 리블빙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보험) 위기상황분석,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하고 선제적인 자본 확충 유도
 - 회계기준 변경(IFRS9 도입)에 따라 도입된 보험회사의 기대신용손실 모형 기반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의 적정성 점검
- (금융투자) 증시하락, 금리상승, 환율변동 등 잠재위험요인 현실화에 대비하여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 * 예) 극단적 시장상황을 감안한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 구축

□ (은행)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체계, 항목, 기준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예)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 마련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손실이 규제자본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손실승수* 적용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바젤Ⅲ 운영리스크 산출시 은행별로 영업이익과 과거 10년간 내부 손실금액을 이용해 산출하는 계수로 내부손실승수가 클수록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증가

○ 필라2 리스크평가 항목 정비·개편, 평가등급 차별화 등을 통한 평가결과 활용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 (보험)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新계약자배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이익원천 분석을 위한 新손익분석기준 검토

○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예비신청절차 등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기반 조성

○ 新제도(IFRS17·K-ICS)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新제도 질의 대응시스템」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무 이슈 등에 적극 대응

□ (금융투자)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및 새로운 리스크 요인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 검토

○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 추진

* (예)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 차등화

- (중소서민) 여전사의 자산·부채 만기구조 관리실태(ALM)를 점검하여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예)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에 관련 사항 반영 등

-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규제('24.12월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검토

2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 ◆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양극화 완화

① 취약차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내실화
 -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차주의 자금부담 완화방안 마련
 -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를 위한 운영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신용대출119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강화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 유도
 - *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內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가칭)」 오픈('23.2분기 예정)
 - 플랫폼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추진
 - *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배달의 민족) 배민아카데미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지속하는 한편,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 참여 유도*
 - * 우수사례(Best Practice) 적극 발굴 및 전파

□ **코로나19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 지원**

- 만기연장·상환유예 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현황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 예) 업종, 신용등급, 소득 등을 활용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
- 신용위험평가 등을 토대로 상환유예 중소기업인에 대한 차주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한 연착륙 방안 마련 모색

②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

□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제휴 등 대체수단 활성화* 유도
 - * 예) 은행권과 점포운영 모범사례 공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 점포폐쇄 전 안내 강화, 사전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 운영 내실화 추진
- 미성년자 금융거래 및 상속처리시 불편사항 등 반복·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무절차 등 개선 추진
-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 확대
 - *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의 은행권 도입* 이후 사용자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타 금융업권(증권, 보험 등)으로 확대 등 검토
 - * 예산 확보, 앱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23년 상반기 중 금융앱 출시 예정

□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

-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고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 추진
 - * 예)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기본등급 적용,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경력 미인정
 - ** 예)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우선 추진

-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 예) ① 암 등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
 ②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 개선

** (현행) 대출금리 = 기준금리(해약환급금 적용금리, 例 4.5%) + 가산금리
 (개선) 대출금리 = 선택금리(例 0~4.5%) + 가산금리, 차액은 보험금 지급시 상계

나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

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인프라 구축

□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 집중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험징후 조기 감지 역량을 확충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유도

* 청약 철회비율·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대비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판매정보 및 판매절차 등을 자율 점검·개선

- 소비자피해 발생 초기에 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는 등 소비자 경각심 제고

* (매체) 금감원 SNS, 소셜라이브, YTN 「생생경제」 (콘텐츠) 카드뉴스, AI 아나운서 동영상 뉴스 등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고도화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 개선 유도

* (현행) 8~10월 평가 후 12월 발표 (개선) 5~9월 평가 후 11월 발표 추진

- 금융회사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건수 등 계량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추진

* 자율조정 성립률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

□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현장 감독 및 지원 강화

-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미흡사항 개선 지도
 - * 예) 판매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상품숙지의무' 이행현황, 투자자 성향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마련 여부 등
-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금소법 이행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해당회사 CCO 등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율적 개선 지원

□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 및 템플릿 개발*
 - * 예) 고등학생 'e-러닝' 개편, 태블릿을 활용한 고령층 대상 실습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②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

□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분쟁발생 예방 노력 강화

- 당사자간 다툼이 동일한 분쟁 건, 법률 및 의료쟁점 등 사안별 유형화가 가능한 분쟁을 유형별로 집중 검토하여 일괄처리*
 - * 분조위에 일괄 부의·처리하거나 분조위 등을 통해 분쟁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쟁점 관련 계량지표 선정이 가능*한 분쟁유형은 계량화를 통해 처리방향을 판단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 예) 백내장 분쟁 관련 연령, 혼탁도 분류등급, 수술 전 시력검사 결과 등
- 분쟁을 유발하는 모호한 약관 등은 유관부서 환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빈발 민원 사례 등을 소비자에게 공시하여 유사 분쟁 재발 방지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객관식 문항 방식의 민원 신청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 민원신청 전에 빠른 해결방법을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FAQ, 분쟁사례 등을 제공하고, 챗봇을 통해 민원 상담

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노력 강화

◆ 불법금융행위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 강화

□ 불법금융행위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

-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권 및 검·경찰 등과의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 소비자경보 발령

* 보이스피싱 합수단 참여(검찰청), 보이스피싱 One-Stop 통합신고·접수시스템 구축(경찰청), 신종 불법금융광고 차단 조치(과기부, 인터넷진흥원 등)

** 신종 사기수법 실시간 현장 전파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조기 파악 및 실행 등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내부통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흡 사항 개선 유도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22.12월 시행된 일괄 지급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제약

- 불법사금융 취약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메신저피싱 가상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 예) ① 대리입금·내구제 대출 : 10~20대(온라인채널, 학교 교육 활용)

② 불법사금융 : 20~50대 직장인·자영업자(온오프라인 채널 병행, 직장 내 교육)

③ 유사수신·불법금융투자 : 60대 이상(지자체 등의 오프라인 채널 활용)

□ 보험사기 방지 역량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공·민영보험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

**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등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피해예방요령 등 정보제공 강화

□ 리딩방, SNS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 행위 집중 감시

-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

3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①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 육성

□ 금융데이터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 검토
 -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 지원
-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 실태 및 AI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 예)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특정 고객집단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 분쟁 등

□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 조성

-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지원, 시장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 후속조치 준비
 - 입법 논의 참여, 주요 해외사례 조사·연구 및 시장 자율규제 관련 자문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
-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22.6월 kick-off)를 통해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 제공
 - 가상자산 관련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에 선제적 대응
-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방안 등 검토

② IT 리스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점검 강화

-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 장애대응 절차 및 매뉴얼, 시스템 이중화 여부, 예비장비 확보 및 백업장비 운영 등

- 모바일앱 및 웹앱* 관련 이용자 인증체계**, 단말기 보안통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거버넌스 체계 등을 중점 검사

* One-App : 하나의 플랫폼(‘앱’)에서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통합 제공

** SSO(Single Sign-on), 안전한 인증방법(예:다중 인증 등) 및 로그인 정보 검증 등

□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시스템 정비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검토
- 최근의 IT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③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 대출비교플랫폼 영업확대 등에 대비한 판매 및 광고규제 정비

-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록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 이후 알고리즘 유지·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新유형 광고 활성화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규제체계 정비

□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상품 개발-판매단계 통합적 모니터링 실시

- 혁신적인 신상품 출시 후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약관 수정 권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점검
- 플랫폼을 통한 예금·보험상품 맞춤형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시 소비자 권익보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약관 마련 유도

* (예)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책임소재, 금소법상 이용자 권리·의무 등

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업권별 감독제도 및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 마련

①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

-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 검토
 - (공통) 업권별·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 사전·사후보고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정비 추진
 - (은행)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개선 검토
 -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감독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혁신 기반 구축
 - (보험)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 전화 모집(TM)시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 등을 결합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도입방안 검토
 - (자산운용)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펀드 보수 및 수수료 운용현황 점검
 - (퇴직연금) 현장점검 등을 통해 新퇴직연금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금리공시 체계 개편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질적 성장 기반 구축
 - * 디폴트옵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②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체계 정비
 -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가격, 수수료,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글로벌 정합성 제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추진(금융위 공동)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新운영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③ ESG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부합하는 감독체계 마련

□ ESG 관련 감독체계 정비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추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국내 기준 정비 추진
 - * '23.1월 국내 ESG 공시기준 제개정 등을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예정
- ESG 펀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검토
 - * 예) 투자자에게 매분기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
- ESG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용한 투자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리스크 관련 감독인프라 구축

- 녹색 부문으로의 신속·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금융권내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스템 구축 지원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발표(환경부 주관, '23년중 적용 예정)
-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유도 및 비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
 -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자연재해 피해 비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재무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량모형

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

◆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 추진

① 금융혁신을 위한 감독 인프라 확충

□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설치·운영

-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하여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발굴·개선

* (감독혁신조정팀) 규제개혁 및 감독관행 혁신사항 발굴 및 개선 등

□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지원

-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 구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¹⁾, 외국·일반사모펀드의 등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²⁾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약관심사 절차 등 개선³⁾

1) 등록 서류접수 시 현장 리뷰(Quick-Review) 신설,

2)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펀드등록·심사시스템 전면 개선 등

3)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 신설 및 심사단계 통보 세분화

②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검사업무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해당연도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 보장
- 광범위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검사목적·범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중점 검사부문별로 모듈화 추진

□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및 경직적 제재관행 개선

-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 하는 등 제재대상자 방어권 제고 관련 개선사항 제도화
-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충실한 자율통제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규행위의 경우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재 대체조치 활성화 추진

4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가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

◆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기반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 유도

□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강화

-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

* 예 : 은행지주·은행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 여부 등

-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부문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관련 개선방안 검토
-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 이사회 운영, 그룹 리스크 통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동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방안 마련

* 현재 대주주 변동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고 지분변동 비율만을 보고받고 있어 적격성 확인 불가

□ 금융회사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책임경영 환경 조성

-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예) 대규모 부동산PF 및 해외투자 등 다수 계열회사 참여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리스크 검토 등

- 금융지주의 빅데이터 등 고객정보 제공·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그룹 내 고객정보 관리절차 개선 방안 검토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표준안(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 적시 공유 및 소통협력관 업무미팅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역량 강화
-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 일정규모 이상 거래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 실시 등

나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 ◆ 투자자 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① 자본시장 공정기반 확충

□ 공매도 감독역량 확충 및 감독 강화

-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 예) 운영 및 소속 임직원의 독립성, 대차거래 및 매매내역 관련 사항 등
-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업무처리 적정성 등 점검

□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 제고

-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 추진

* 독립리서치회사(IRP) : Independent Reserch Provider

□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권 시장 투명성 제고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 부담 경감·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② 공시 및 회계 정보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 공시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인프라 확충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 정비
 -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영문 DART 공시정보 확대 추진

□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회계법인 역량 제고

- 회계부정 위험요소별로 회계오류 적발률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항목수, 중요도 등) 재정비
-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단호히 대처
-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조력** 기업 등은 수사·세무당국 등 적극 통보

* (FY'22) 자산 2조원 이상 → (FY'23) 5천억원~2조원 → (FY'24) 1천억원~5천억원

** 예) 매출 부풀리기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수증 등을 수취·발행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新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 강화
 - * 예) 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등과 연계
 - ②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지정제외 점수 부과
-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가이드 및 모범사례 마련
 - 지정감사 비중의 적정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방식·재지정절차 등 개선

③ 조사업무 인프라 개선 및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 엄단

□ 효과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불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 지원시스템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
 - * 예) 투자조합 모니터링 기능 : 투자조합 및 조합원 연계성 시각화, 과거 사건 연관 조합 및 조합원의 신규 지분공시 시 알림메시지 등
- 유관기관과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공정거래 위험 요인 신속 파악을 위해 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엄중 조치
-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 조사

* 사모 전환사채 발행내역을 전수점검하고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 대응

- CB·BW 인수인의 지분공시 위반*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 심사 활용

* 예) CB·BW를 인수하여 해당 법인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하는 사례

- TRS*, CFD**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 TRS(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 ** CFD(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다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엄정 대응

◆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및 관행에 엄정 대응

□ 금리 상승기 소비자피해 우려 부당영업행위 근절

-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 점검

* ① 핵심정보 안내 여부, ② 신청요건 표준화 및 심사기준 투명화, ③ 운영실적 비교 공시 등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및 위탁은행의 내부통제체계 점검

* 예) 여신취급 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 등

** 예) 수수료 부당 수취,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중개 행위, 1社 전속의무 위반 등

□ 보험권 완전판매 문화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 초년도 모집수수료 규제 도입에 따른 우회적 수수료 지급* 현황 및 시장 영향 등을 분석 및 점검

* 정착지원금, 시책 등 설계사에게 별도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미리 제공하는 행위

-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안내서 양식 내실화

* 기존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

-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개선*

* 예)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원칙적 선임 동의 등

□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강화

- 증권사 신탁·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 검사

-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점검

* 대주주·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등